

KIEP

지역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2009년 6월 24일
ISSN 1976-0507 Vol. 3 No. 25

유럽의회 선거결과와 향후 전망

강 유 덕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부연구위원 (ydkang@kiep.go.kr, Tel: 3460-1123)

■ 지난 6월 4~7일에 EU 27개국에서 일제히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는 43.3%의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함.

- EU 기관 중 유일하게 직접선거 방식으로 구성되는 유럽의회에 투표율이 낮은 것은 점차 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유럽의회의 위상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점으로 지적됨.

■ 유럽 각국이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우파의 승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EU 27개국 중 독일,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18개국에서 우파가 승리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좌파는 6개국에서 승리하는 데 그침.

- 중도우파인 유럽국민당이 35%의 득표율로 264석을 획득하며 지난 의회에 이어 제1당 자리를 굳힌 데 반해, 유럽사회당은 지난 의회보다 56석이 줄어든 161석을 차지하는 부진을 보이며 원내 의석비중이 28%에서 22%로 낮아짐.

- 녹색당은 72석(7%)을 획득하며 지난 의회의 44석(5%)에 비해 괄목할 만한 약진을 기록함.

■ 우파정당의 승리로 현 집행위원회 의장인 우파성향의 호세 마누엘 바로소(José Manuel Barroso)의 재임이 유력시됨.

- 경제위기의 와중에도 유럽의회가 보호무역으로 선회하지 않는 한편, 자유무역에 옹호적인 바로소가 유임될 경우, 현재 한·EU FTA가 타결될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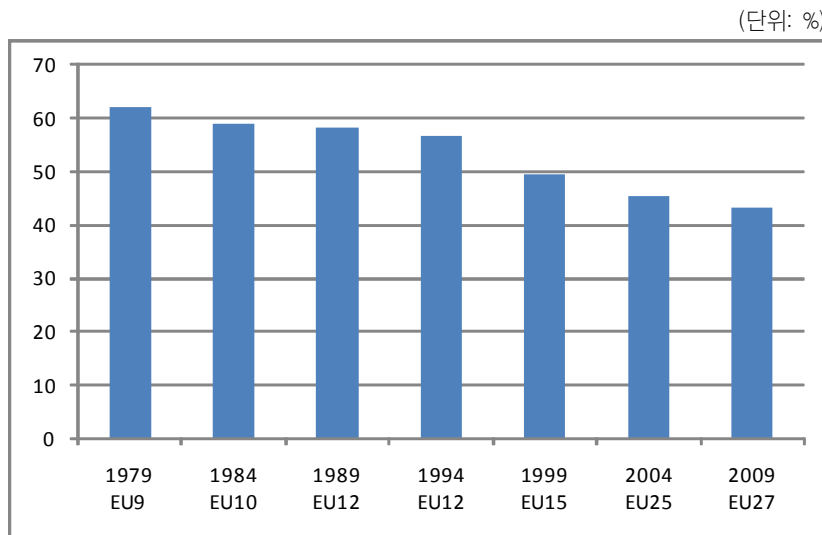
- 녹색당의 약진으로 EU가 기후변화, 환경 등의 정책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역외생산물에 대한 EU의 환경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1. 유럽의회 선거결과

가. 유럽의회(2009~2014) 선거결과

- 지난 6월 4~7일에 EU 27개국에서 일제히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는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함.
- 이번 제7차 유럽의회 선거는 EU 27개국의 5억이 넘는 유럽시민을 대표할 736명의 의원을 선출함.
- 이번 선거에서는 역대 최저투표율인 43.3%의 투표율을 기록함.

그림 1. 역대 유럽의회 선거 투표율 추이



자료: European Parliament(www.elections2009-results.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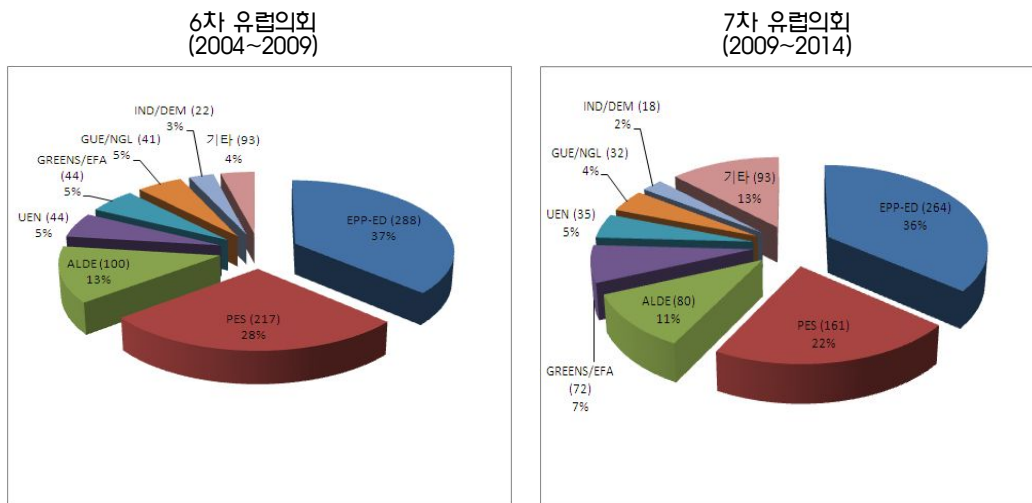
- 1979년 직접선거로 이루어진 제1차 유럽의회 선거에서 당시의 9개 회원국은 62%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나 이후 투표율은 계속 하락세를 기록해왔음.
- 이번 선거에서 독일, 프랑스, 영국의 평균 투표율은 39.4%로 전체 EU의 투표율을 밑도는 수준이며, 신규 12개 가입국의 평균 투표율 또한 32.3%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함.
- 최고 투표율: 룩셈부르크(91.0%), 최저 투표율: 슬로바키아(19.6%)
- 일부 국가에서는 국내선거와 동시에 치러졌고, 투표참여가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유럽의회 선거만을 위한 자발적 투표율은 더 낮게 나올 수도 있음.¹⁾

- 유럽의회가 EU 기관 중 유일하게 직접선거 방식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이 저조한 투표율은 점차 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유럽의회 위상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점으로 지적됨.

나. 정당별 선거결과

- 유럽 각국이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우파의 승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그림 2. 유럽의회 정당별 의석수 추이



자료: European Parliament(www.elections2009-results.eu).

표 1. 유럽의회의 정치그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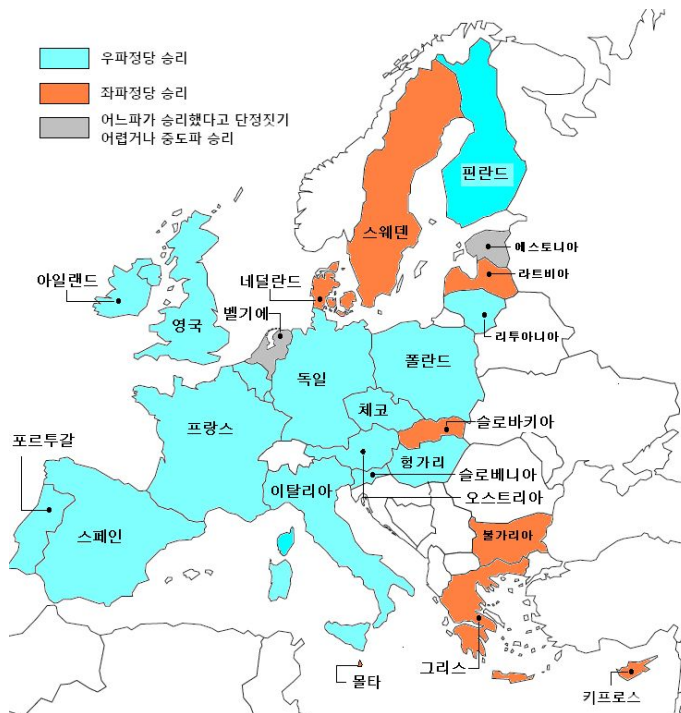
영문 명칭	명칭	정치적 성향
EPP-ED (European People's Party-European Democrats)	유럽국민당-유럽민주당	기독교 민주주의, 보수파, 중도우파
PES(Party of European Socialists)	유럽사회당	사회주의, 중도좌파
ALDE (Alliance of Liberals and Democrats for Europe)	유럽자유민주연대	중도파
GREEN/EFA (Group of the Greens/European Free Alliance)	녹색당/유럽자유연대	녹색당, 범지역주의 연합
UEN(Union for Europe of the Nations Group)	유럽국가연합	극우파
GUE/NGL(Confederal Group of the European United Left/Nordic Green Left)	유럽통합좌파/북구녹색좌파 그룹	공산주의, 극좌파
IND/DEM(Independence/Democracy Group)	민주주의와 다양성 그룹	유럽연합 회의주의-우파
Others(Non-inscrits)	비정파 그룹	무소속

자료: European Parliament.

- 1) 그리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키프로스에서는 유럽의회 선거참여를 의무화(compulsory voting)하고 있으며, 이번 선거 중 룩셈부르크, 영국, 벨기에, 아일랜드 등 8개국에서는 총선, 지방의회 선거 등이 동시에 치러졌음.
- 2) 유럽의회에 진출한 각국의 의원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원내 정치그룹을 형성하며, 이 그룹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침.

- 지난 의회(785석)에 비해 의석 수가 줄어든 이번 의회(736석)에서, 중도우파인 유럽국민당³⁾이 35%를 얻어 지난 의회에 이어 264석으로 원내 1당 자리를 굳힌 데 반해, 중도좌파인 유럽사회당은 지난 의회보다 56석이 줄어든 161석을 차지하며 의석 비중이 28%에서 22%로 낮아짐.⁴⁾
- EU 27개국 중, 18개국에서 우파가 승리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좌파는 6개국에서 승리하는 데 그침.

그림 3. 국가별 유럽의회 선거결과



주: 각국별 득표율 1위 정당과 해당 정당의 유럽의회에서의 소속 기준으로 작성.

-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모든 좌파정당 집권국에서는 우파정당이 득표율 1위를 차지한 반면, 우파정당이 집권한 것으로 간주되는 14개국 중에서 좌파정당이 1위를 차지한 국가는 라트비아, 몰타, 스웨덴에 불과함.⁵⁾
- 유럽의 주요국인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모두 우파정당이 승리함.

3) 공식명칭은 유럽국민당-유럽민주당(European People's Party-European Democrats)이 되어야 하나 편의상 유럽국민당으로 지칭함.

4) 2004년 제6차 유럽의회에서 총 의석수는 니스 조약에 의거 732석이었으나, 2007년 루마니아(35석)와 불가리아(18석)에 대한 추가선거를 통해 785석으로 확대됨.

5) **우파정부**: 그리스, 네덜란드(우파주도 연정), 덴마크, 독일(우파주도 연정),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스웨덴,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프랑스 / **좌파정부**: 불가리아, 키프로스, 스페인, 슬로바키아(좌파주도 연정), 슬로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좌파주도 연정), 포르투갈, 헝가리 / **좌우연정(Coalition)**: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핀란드

- 유럽국민당의 의석수는 2004년 6차 선거 때의 268석에 비해 2석 줄어들었지만 영국 보수당(25명 당선)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거둔 성적이므로 유럽의회에서 그 입지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전체의석 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녹색당은 의석획득에 있어서 가장 큰 약진을 기록함.

- 녹색당은 72석(7%)을 획득하며 지난 의회의 44석(5%)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프랑스에서는 다니엘 콘벤디트(Daniel Cohn-Bendit)의 주도하에 지난 선거에 비해 8석을 더 획득하며 제2정당인 사회당과 동수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함.
- 녹색당은 전통적인 중도좌파 정당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프랑스, 독일,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등에서 크게 약진했는데, 기존 정당들이 국내 이슈를 중심으로 선거 캠페인을 펼친 데 반해, 녹색당 계열은 환경관련 주제를 이슈화하며 범유럽적 홍보활동을 전개함.

■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반이민, 외국인차별, 반유럽정서를 자극하는 선거 캠페인을 펼친 극우당이 약진을 보였으나 전체 의석 수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함.

- 이탈리아의 북부리그(Lega Nord)는 10.2%의 득표율로 9석을 획득, 네덜란드의 자유당(Party for Freedom)은 17%로 4석, 영국의 국민당(British National Party)이 6.5%로 2석, 오스트리아의 자유당이 13.1%로 2석, 헝가리의 요비크(Jobbik)가 14.8%로 3석, 덴마크의 국민당(People's Party)이 14.8%로 2석을 차지함.
- 좌파정당들이 경기침체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를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데 실패한 반면, 극우정당들은 치안, 이민, 고용불안 등의 이슈에 대한 강경발언을 통해 유권자들의 관심을 돌리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유럽의회에서 범유럽적 응집력이 결여된 극우파(주권주의, 유럽회의주의, 유럽 혐오주의)가 차지하는 전체 비중은 13%(96석)로 의정활동을 주도할 수 있는 규모로 보기는 어려움.

2. 선거결과 분석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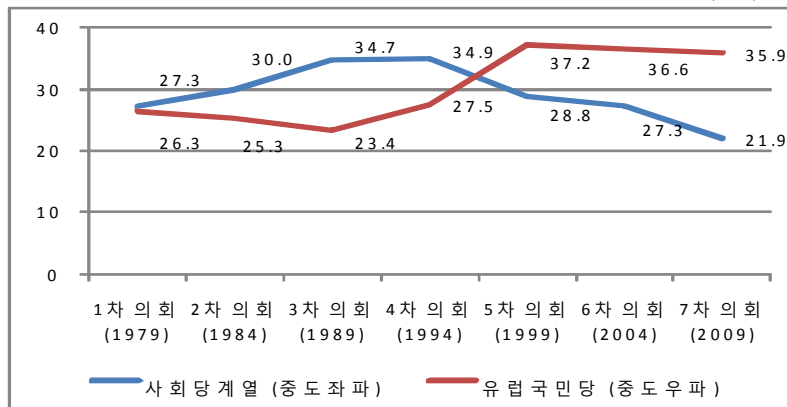
가. 선거결과 분석

-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친시장적 우파정당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유권자들은 우파정당에 더 많은 지지를 표시했음.

-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우파정당이 집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정부의 성과에 대한 비판으로 좌파정당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야 하지만,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옴.
- 이는 이들 정부가 정부주도형 개입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위한 발빠른 행보를 보임으로써 중도성향 유권자들의 표를 끌어오는 데에 성공한 반면, 좌파정당은 내부 분열 및 리더십 문제(프랑스, 이탈리아) 등으로 인해 우파정당과 차별화된, 일관성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지 못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유럽의회에서는 직선제 시행 이후 1994년까지는 사회주의 성향의 유럽사회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었으나 1999년 제5차 선거에서부터 우파인 유럽국민당의 우세가 지속되어옴.

그림 4. 유럽의회 주요 정치그룹의 의석비중 비교

(단위: %)



주: 1994년 선거부터는 EPP가 ED와 연합으로 중도우파를 형성.

자료: European Parliament.

■ 유럽议회의 권한은 점점 확대되어가는 반면, 투표율은 점점 하향세를 보임.

- 유럽의회는 입법, 예산권 분야에서 EU 이사회(각료이사회)에 대해 그 권한이 확대되어 왔으며, 행정,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집행위원회에 관한 견제기능이 강화되어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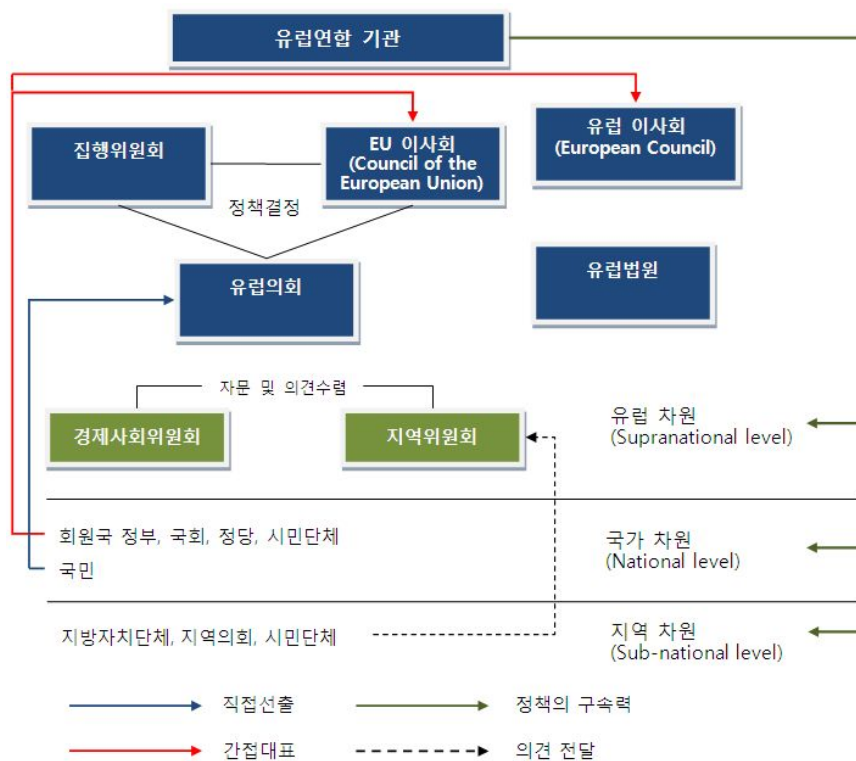
표 2. 조약 체결에 따른 유럽议회의 권한 변화

주요 조약(체결연도/발효연도)	유럽의회에 대한 영향
예산조약 (1975/1977)	- 예산의 승인/거부/조정권 부여
단일유럽의정서(1986/1987)	- 협조절차(Cooperation procedure)와 동의절차(Assent 부여)
마스트리히트 조약(1992/1993)	- 공동결정절차(Co-decision procedure) 도입 - EU 집행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권 부여
암스테르담 조약(1997/1999)	- EU 집행위원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권 부여 - 공동결정 부문의 확대
니스 조약(2001/2003)	- 유럽의회 의원 수 확대 - 공동결정 부문의 확대(가중다수결 방식이 적용되는 대부분의 분야)
리스본 조약(2007/2009)	- EU 집행위원회 의장에 대한 임명권 부여 - 공동결정 부문의 확대

자료: European Parliament; 외교통상부(2007), 『EU정책브리핑』; Fondation Robert Schuman(2007).

- EU 기관들의 민주성 결여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유럽의회는 유일하게 직접선거를 통해서 구성되는 민주적 합법성을 갖춘 기관임.
- 유럽의회 권한 확대는 ‘집행위원회-EU이사회-유럽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유럽의 거버넌스(governance)에 보다 민주적 성격을 부여하는 한편, 일반 유럽시민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음.
- 그러나 이러한 유럽의회 구성을 위한 투표율이 하락하는 것은 유럽관련 이슈에 대한 정치적 무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적됨.

그림 5. 유럽연합의 다층적 의사결정 구조



자료: www.dadalos-europe.org

- 각국의 주요 정당들은 유럽 차원의 정책 및 공약을 제시하지 못한 채 국내 이슈들을 중심으로 선거 캠페인을 전개함.
- 유럽의회 선거는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각국의 정당들은 국내 선거의 연장선에서 유럽의회 선거 캠페인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음.
- 반면에 녹색당 계열은 환경과 관련된 유럽차원의 이슈를 중심으로 한 선거 캠페인을 펼쳐왔으며, 정치 영역에서의 유럽화(europeanization)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음.

- 유럽회의론자 그룹 역시 국내 이슈를 다루기보다는 EU 차원의 이민정책, 터키의 EU 가입 문제 등, 유럽차원의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영국과 네덜란드 등에서는 2위의 득표율을 보였음.

나. 제도적 문제점

- 현재 유럽의회의 제도적 틀과 구성하에서는 정책적 대립보다는 타협, 합의 등을 통한 정치관행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음.
- 비례대표제도의 특성상, 군소정당들이 쉽게 진출할 수 있고, 다국적 국가가 갖는 다양성으로 인해 과반을 넘는 다수당이 나오기 힘든 구조를 띄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치적 대립, 대결보다는 합의나 연합 등을 통한 정치문화와 관행이 정착되어 있음.
- 우파인 유럽국민당과 좌파인 유럽사회당이 국회의장과 위원회 의장의 선출, 집행위원회 위원의 임명들과 같은 문제에서 협상을 통한 나눠먹기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왔음.
- 원내의 정치적 대립이 국내 정치에 비해 적으므로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EU의 실질적인 행정기관인 집행위원회의 의장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견제기관인 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이므로, 중도성향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도가 떨어지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극우성향의 정당이 국내 선거에 비해 득세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유럽의회의 의사결정 방식과 관행이 절충적이고 건설적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해주지만 대립을 피하게 함으로써 비정치화를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음.
- 이러한 비정치화로 인해 유럽의회의 업무에 대해 언론매체와 회원국 국회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한편, 이로 인해 선거 시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게 된다고 지적됨.

3. 향후 전망

가. 집행위원회와의 관계

- 우파정당의 승리로 현 집행위원회 의장인 우파성향의 호세 마누엘 바로소(José Manuel Barroso)의 재임이 유력시됨.⁶⁾

- 현 집행위원회 의장인 바로소의 임기는 올 10월 31일까지이며, 바로소가 재임의사를 밝히는 가운데, 현재 우파가 집권 중인 유럽 주요국 정부는 바로소의 유임에 긍정적인 입장임.
- 우파정당이 집권 중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바로소의 유임을 지지하고 있으며, 좌파정부의 수반인 영국의 브라운, 스페인의 자파테로, 포르투갈의 소크라테스 총리 등도 지지의사를 밝혔음.
- 유럽국민당은 이미 지난 4월 바로소의 유임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 다시 최대 의석수를 차지함에 따라 유임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짐.
- 바로소의 유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구체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 녹색당의 리더인 다니엘 콘벤디트 등이 사회당 계열과 이탈리아 민주당 등을 포섭, 反 바로소 연합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원내 제2당인 유럽사회당은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기보다는 바로소의 유임에 찬성 또는 기권 등의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향후 원내 보직구성 등을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됨.

나. 리스본 조약과 유럽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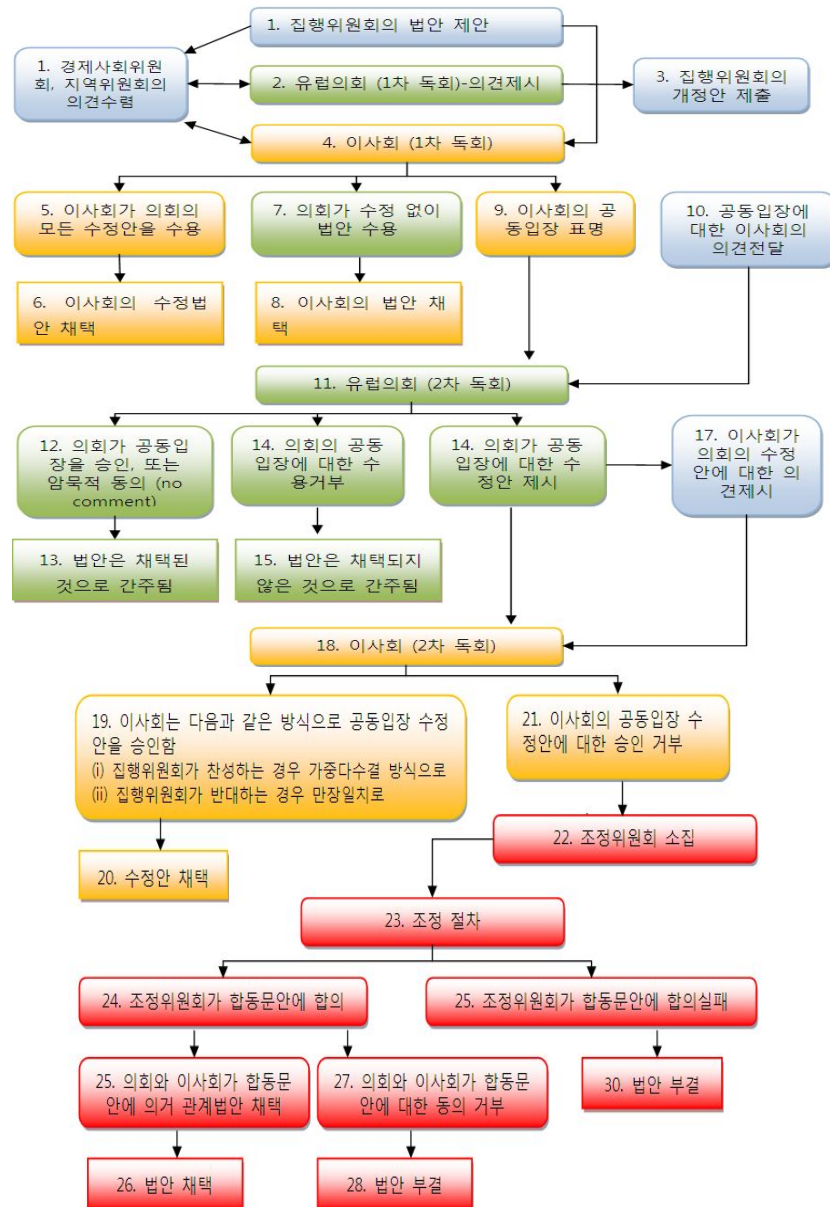
- 리스본 조약은 유럽의회를 EU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의회 의 권한을 확대시킴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더 강화시킴.
- 현재의 리스본 조약은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유럽국가에서 인준을 마친 상태임.⁷⁾
- 리스본 조약이 발효될 경우, 공동결정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유럽의회 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입법 및 예산에 있어서의 권한이 확대되는 등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각료이사회), 집행위원회 간의 힘의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6) 니스 조약(214조)에 의거, 집행위원회의 의장은 유럽정상들이 모인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에서 후보에 대한 가중다수결 선거방식으로 추대되며, 유럽의회는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의회가 동의하는 경우, 의장지명자는 집행위원들을 선정하게 되며, 전체집행위원들의 인선에 대한 유럽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됨. 유럽의회가 동의하는 경우, 유럽이사회에 의해 집행위원회 의장 및 집행위원의 임명이 최종 확정됨.

7) 리스본 조약은 2004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부결된 유럽헌법안(Treaty establishing a Constitution for Europe)에 대한 대안으로 작성되었으며, 2007년 12월 13일 리스본에서 27개국 국가원수 및 행정수반에 의해 서명되었음. 2008년 1월 29일 몰타와 슬로베니아를 시작으로 26개국에서 의회를 통해 비준되었으나, 아일랜드에서는 2008년 6월 12일 국민투표에서 53.4%의 반대로 조약이 부결됨. 아일랜드는 2009년 가을에 국민투표를 다시 치를 예정이며, 여기에서 통과될 경우 리스본 조약은 동년 11월 1일 발효 예정임.

- 역내시장과 경제관련 사항 등 기존 EU의 권한 영역 외에 개별 국가 소관이었던 국경 검문, 망명, 이민 등 50여 개의 영역으로 공동결정 절차가 확대됨.
- EU 이사회가 결정권에서 우위를 갖던 강제지출 분야(예: 농업관련 지출)로 의회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유럽의회는 예산에 관해 이사회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게 됨.

그림 6. 공동결정절차(Co-decision procedure)의 절차



자료: European Commission(<http://ec.europa.eu>).

- 리스본 조약은 유럽의회가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의 제안을 바탕으로 집행위원회 의장을 선출한다는 것을 명문화함으로써, 유럽의회 선거결과가 집행위원회 구성에 더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함.

- 리스본 조약은 국가별 의원수를 재조정함으로써 형평성을 고려하는 한편, 기존 단순다수결로 이루어지던 유럽의회 집행위원회 의장 인준을 절대다수결로 바꿈으로써 집행위원회 구성에 의회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표 3. 유럽의회 내 각국 의석 수의 변화

국가	2007	2009	변화	리스본 조약	비교	국가	2007	2009	변화	리스본 조약	비교
독일	99	99	0	96	-3	오스트리아	18	17	-1	19	2
프랑스	78	72	-6	74	2	불가리아	18	17	-1	18	1
이탈리아	78	72	-6	73	1	덴마크	14	13	-1	13	0
영국	78	72	-6	73	1	핀란드	14	13	-1	13	0
스페인	54	50	-4	54	4	슬로바키아	14	13	-1	13	0
폴란드	54	50	-4	51	1	아일랜드	13	12	-1	12	0
루마니아	35	33	-2	33	0	리투아니아	13	12	-1	12	0
네덜란드	27	25	-2	26	1	라트비아	9	8	-1	9	1
벨기에	24	22	-2	22	0	슬로베니아	7	7	0	8	1
그리스	24	22	-2	22	0	키프로스	6	6	0	6	0
헝가리	24	22	-2	22	0	에스토니아	6	6	0	6	0
포르투갈	24	22	-2	22	0	룩셈부르크	6	6	0	6	0
체코	24	22	-2	22	0	몰타	5	5	0	6	1
스위덴	19	18	-1	20	2	총 의석 수	785	736	-49	751	+18/-3

주: 1) '변화'는 2007년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EU 가입 후 총 의석 수와 2009년 의석 수의 변화.
 2) 비교는 2009년 의석 수(니스 조약에 의거)와 리스본 조약에 따른 의석수의 차이.
 3) 리스본 조약에 따른 총 의석 수 751석에서 일반적으로 의회 의장석을 제외하므로 총 의원 수는 750명임.
 자료: European Parliament(www.europarl.europa.eu/parliament).

- 이번 바로소의 재임에 리스본 조약이 적용될 경우 총 의원 수의 절대다수인 369표의 동의를 필요한 상황임.
- 이로 인해 바로소가 유럽의회가 개원되는 7월 중에 니스 조약하의 단순다수결 방식으로 재임을 확정받고 싶어한다는 관측이 나옴.
- 유럽의회 이러한 영향력 확대는 유럽의회와 집행위원회의 정치화(politicization)를 통해 EU 업무에 대한 일반 시민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유럽의회를 통해 집행위원회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각 기관에 대한 민주적 합법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유럽의회에서 우파정당이 우세를 점함으로써 한·EU FTA에 대한 타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 현재 EU의 역외국과의 FTA 정책은 집행위원회가 2006년 발표한 자유개방적 기조의 Global Europe 전략에 따른 것임.

- Global Europe에서는 FTA 대상국으로서 한국, 인도, ASEAN을 선정했으며, 이 중 한국과의 협상이 가장 진전된 상황임.
- 유럽의회는 각 지역의 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집행위원회의 견제기관으로서 원내 공청회와 권고문 등을 통해 집행위원회의 FTA 협상에 영향을 끼치게 됨.
- 경제위기의 와중에도 유럽의회가 보호무역으로 선화하지 않는 한편, 자유무역에 옹호적인 바로소가 유입될 경우, 현재 한·EU FTA가 타결될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녹색당의 약진은 기후변화, 환경 등의 정책에 있어서 EU가 국제사회에서 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음.
- EU는 교토의정서를 비롯해 환경정책에서 국제사회의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이 부분에서 EU의 역할 및 영향력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EU의 역내시장에 진출하는 역외생산품에 대한 환경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선진 경제권의 환경규제 등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적 생산구조, 상품개발 등이 필요한 한편, 장기적으로 국내 환경관련 규제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